

은행 '국민 밭상'에서 벗어나려면

경제포커스



김홍수
논설위원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을 무분별하게 팔아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끼쳐 왔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20년 전 국가와 국민에게 큰 신세를 진 바 있다. 과도한 외채 도입과 무분별한 기업대출 탓에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덕에 기사화 생겼다. '손실의 사회화' 덕에 살아남았음에도, 독과점 면허 덕에 손쉽게 얻는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있다.

**독과점 덕에 손쉬운 돈벌이
호봉제 덕에 역대 연봉
직무급 도입해 생산성 높이고
이익 주주 환원 늘려야**

지난해 국내 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덕에 50조원대 이자 수익을 올렸다. 막대한 수익 창출엔 압제 영업도 한몫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2%포인트 이상 올리는 동안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빠르게, 예금금리는 느리게 올렸다. 그 결과 예대금리 차가 2014년 이후 최대 폭(2.46%포인트)으로 벌어져 이자 마진을 더 키웠다. 은행 노동들은 이런 이익을 근거로 정년 65세 연장, 주 4일 근무, 임금 6.1%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벌였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유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던 은행들은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래저래 '국민 밭상'이 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금융지주 회장들은 '위기'를 말하며 "빙하기엔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기르자" (KB 회장),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절박하다" (신한 지주 회장)고 강조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매년 그랬듯 성과급·명퇴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명퇴 조건은 갈수록 후해져 요즘엔 퇴직자들에게 자녀 대학 학자금 2800만원, 재취업 지원금 3400만원, 퇴직자 본인·배우자 건강검진비까지 지원해 준다. 반면 주주들에게 은행 주식은 만년 저평가주다. 주식 가치가 은행 보유 자산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들은 이익의 4분의 1 정도만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같은 주가 관리에도 인색하다. 은행 임직원 그들만의 잔치에 참다 못한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이 국민 밭상 기업이 된 데는 경영진이 '좋은 게 좋은 게'라는 식으로 노조와 타협해온 탓도 있다. 갑작스레 밀려온 고금리 파고 탓에 국민 다수가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은행들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라 금융 취약 계층의 빛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나이가 직 무급을 도입해 '호봉제-고비용 명퇴' 악순환을 끊고, 이익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이 상장 기업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국민에게 진 신세를 갚는 길이다.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168]

뉴욕 꽃택시 프로젝트

도시의 교통수단은 길거리 풍경에서 비중 있는 요소다. 뉴욕의 '옐로캡(Yellow Cab)' 택시 역시 도시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1907년부터 운행된 옐로캡의 100주년인 2007년, 뉴욕에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다. 노란 택시 표면에 온통 꽃 그림으로 덮인 것이다. '교통의 정원(Garden in Transit)'이라는 제목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된 공공 예술 이벤트였다. 이를 위해서 뉴욕의 1만3000대 택시에 8만개의 꽃이 그려졌다. 참여했던 2만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었다.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 '희망의 그림(Portraits of Hope)'은 1995년부터 바지선, 소방차, 경비행기, 공장 굴뚝, 학교 체육관 벽 등을 화사한 꽃 그림으로 장식해왔다. 원래 예술 치료(Art Therapy)의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여서 장애인이나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이 주로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팀워크를 배우고, "저 꽃을 내가 그렸다"고 하는 소속감도 가지게 된다. 꽃은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고, 생명과 재생을 의미하는 만큼 공공의 인이다. 기하학적으로 단순하게 도안한 것은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이라는 설명이다. 주제 측은 '교통의 정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6년간의 협상 끝에 뉴욕시의 허가를 받았다. 다음번엔 옐로캡이 200주년이 되는 2107년이 되어야 반복하는 조건이었다.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뉴욕의 택시 승객들은 꽃



마차를 타는 기본으로 꽃 택시 탑승을 즐겼다. 꽃의 향기가 시각적으로 치환되어 도심에 화사하게 덮였다. 행사 이후에도 많은 기사는 자신들의 택시에서 꽃 그림 데칼(decals)을 떼기를 거부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웃들이 좋아하고, 승객들이 좋아한다는 이유에서였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프로젝트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것은 '임시'였기 때문이다. 마치 한때 아름답게 피었다 시드는 꽃처럼, 그리고 한때여서 더 아름다운 우리 인생처럼. 뉴욕 FIT 교수·마에미미대 명예석좌교수



社 説

연금 개혁, 정부는 속도 높이고 야당은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보험료 인상, 소득 대체율 인상, 연금 지급과 의무 가입 연령 상향률 목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특위에 보고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지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특위는 이 내용을 4월 말까지 논의하는 것이 대체적인 일정이다. 그런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안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무책임하다"며 "연금 개혁은 정부가 책임지고 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연금특위를 가동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나올 반발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책임 떠넘기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집권 5년 내내 연금 개혁을 철저히 외면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위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연금 개혁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근거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오는 3월에야 발표하고 10월에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회 논의와 따로 가는 듯한 이 절차는 상황을 어지럽게 만든다. 복지부는 우선 마무리 단계는 장기 재정 추계라도 신속히 내놓아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은 4월 말까지 국회 논의에 힘을 실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게 무산될 경우 10월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해 다시 시도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만 한다. 연금 개혁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음 총선에서 득표 전략과 연계시킬 가능성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개혁이다. 야당 입장에서 이를 정부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연금 개혁은 다시 무산될지 모른다. 정부는 국정 책임을 지고 있고, 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연금 개혁 문제만은 정치 표 계산을 떠나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기 바란다.

관공서 불법 점거가 무슨 유행처럼 된 나라

최근 민노총, 이권 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점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에선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청 출입구 현관에 텐트를 치고 한 달 가량 농성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에선 민노총 산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노조원 수십명이 인력 총원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동안 구청장실 앞 보도와 민원실을 점거하다 지난달 말 강제 해산됐다. 대구·대진시청에서도 지난달 노조원들이 불법 점거 시위를 벌였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민노총이 마치 폭력 면허를 얻은 듯 전국 관공서를 돌가며 불법 점거했던 양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청사 점거가 유행'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는 당장 민원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은 노조원 재진입을 막기 위해 구청 출입구 네 곳 중 세 곳은 아예 셔터를 내렸다. 유일하게 열린 문 앞에선 구청 직원 두 명이 서서 민원인들이 노조원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는 '민원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엔 노조원들의 재진입 움직임에 놀란 구청 측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1시간

동안 민원인 20여 명이 구청 건물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 점거가 이어지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권력을 사실상 방치해온 탓이 크다. 문 정권 시절 민노총은 검찰청사, 지방노동청 등 20여 곳 공공기관을 무단 점거했다. 기업 노무 담당 임원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려 놓고선 경찰이 출동하자 '잡새'라 부르며 비아냥댔다. 그런데도 경찰은 정권 편인 민노총을 상전 모시듯 했다. 그러나 민노총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관공서나 기업을 제 집 안방처럼 점거하는 것이다. 지난해 민노총 노조원들이 하이틴으로 분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불법 점거했을 때도 경찰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정권 교체 후에도 그렇게 경찰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 민노총은 물론 이런 단체들까지 불법 점거를 일삼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경찰이 엄정 대응 원칙을 세우고 서울 강북구청, 대구·대진시청 점거 사건에 경찰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끌어냈다. 일부는 현행 법으로 체포했다고 한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알박기 방지법' 논의와 별개로 文정부 기관장들 먼저 물러나길

여야 정책 협의체가 4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가 참여한다. 임기 일치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잔여 임기 문제로 소모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최근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공직은 따로 구분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제도화돼 있다. 우리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논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만 대상이고 정무부 기관장은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은 논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큰 관계없는 실무적 성격을 띤 곳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집행하고 지원해야 하는 공공기관

도 적지 않다.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처럼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자리도 있다. 이런 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버티기와 국정 방해일 뿐이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지원하는 조직이다.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임무가 판이해지는 곳이 많다. 이런 곳은 대통령이 바뀌면 기관장 임기가 남았더라도 물러나는 게 상식에 맞는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마치 단합이라도 한 듯 일제히 버티기에 들어갔다. 얼마 전 공공기관 간부를 조사해보니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86%(2655명)에 달했다. 이것이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결과인가. 문 정부는 임기 종료 6개월 전 기관장·임원 등 59명을 무더기 임명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남발했다. 여야의 논의와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잠시 더 자리에 남아있을수록 추해질 뿐이다.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김정은은 꼬박꼬박 '위원장', 전두환 전대통령은 그냥 '전두환'인 나라

전직 대통령 유골, 누일 곳 없어 1년 넘게 자택에..., "정말 이상하다... 정상 국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순자여사와 박선영 물망초이사장(18대 국회의원)

이순자 여사를 만났다. 만감이 교차했다.

기자 시절 1980년과 1982년에 인터뷰하고, 1983년 파리로 떠나기 전까지 간간히 취재, 보도를 했으니 40여 년 전에 뵈고 차음이다. 여사는 연희동 자택 입구방에 남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골을 모시고 혼자 사신다. 물론 가까이 사는 딸과 서울에 사는 손자 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남편 유골을 집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어떨지... 가슴이 아렸다.

국민 대다수도 모를 이해할 수 없는 일

4시에 만나서 9시에 헤어졌다. 그동안 겪었던 슬한 일들, 내가 몰랐던, 국민 대다수도 모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 정말 이상한 대한민국이다. 김정은은 꼬박꼬박 위원장이고, 전 대통령은 그냥 전두환이다. "정치, 경제는 참 잘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또 그가 만들어 놓은 고수부지, 한강공원에서 열심히 달리

고 놀고 즐기면서, 왜 그 대통령은 모 한자라도 없이 1년이 넘도록 유골로 거실에 있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다. 그래도 83세, 내년이면 84세가 되는 이 여사님은 총명했다. 기억력도 놀랄 만큼 정확했고, 큰 수술도 여러 번 하셨다는데, 건강도 연세보다 훨씬 좋으셨다.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 작업을 직접 하신다니... 언어 구사력과 판단력도 정확하고 명석했다. 무엇보다도 자세가 참 꼳꼳했다. 육체적 자세든, 정신적 자세든. 난 그 점이 정말 좋았다. 5시간 내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뎌오셨을까?였다. 5시간 후에 집으로 오면서 든 생각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저 부부만큼 순애보와 부부애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였고.

북한으로부터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

부디 앞으로는 건강하셨으면... 빨리 지아비를 언 땅에라도 지아비의 유언처럼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모시고, 통일을 바라는 그 마음 그대로 마음 편히 평화롭게 사셨으면 좋겠다. 정치 경계 이외의 일들과 그것에 대한 평가는, 머지 않아 곧 정리가 될 테니까. 북한이 거품을 물고 목하고, 죽이려고 드는 대상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니까. 산 자든 죽은 자든, 북한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순서대로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름 아닌 북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누일 곳이 없어 그 부인이 유골을 집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정상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18대 국회의원)
e-mail: sy0406@naver.com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2월 25일 게재 되었습니다.